

외국인 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을 중심으로

정찬원

외교부 본부근무, 전 주나고야 총영사

본 연구는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로서 첫째 최근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은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어떠한 요망 또는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일본인은 어떠한 「재일한국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정하였다. 위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재일한국인의 경우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 간부 및 산하 단체장 204명,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간부 70명, 재일본 한국인 청년상공회 전국 간부 56명, 나고야 거주 재일한국인 119명 등 전체 449명으로부터 2001년 3월 20일~2001년 4월 13일간 자료를 회수, 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인의 경우는 나고야 거주 일본 사회인 256명,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생 24명, 숙덕대학교 대학생 109명 등 전체 389명으로부터 2001년 5월 30일~2001년 6월 20일간 자료를 회수,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은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은 현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제도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면 일본인들은 자국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 행정에 관심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과 관련, 재일한국인들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252명이 11가지의 안을, 일본인은 67명이 16가지를 그리고 이에 관한 의견 및 요망 사항으로 재일한국인은 74명이 23가지를, 일본인은 31명이 21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재일한국인관」은 설문 내용에 따라 밝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선행 연구가 조사 대상자를 재일한국인에 국한된 연구였으나 일본인의 인식을 동시에 병행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된 그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1. 서론

재외한국인의 수는 2001년 1월 1일 현재 5,653,809명으로 그 중 북미지역이 2,123,176명, 중국지역 1,887,558명, 일본지역은 체류자를 포함 640,234명, 독립국가연합 521,694명, 캐나다지역 140,896명, 아주지역 142,931명(중국, 일본 제외), 중남미지역 111,462명, 독일 등 구주지역 73,379명, 중동지역은 7,208명, 아프리카 5,280명으로 재일한국인은 전체 재외한국인의 11.32%를 점하고 있다(외교통상부,

2001a: 15). 그리고 2000년 12월말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 총수는 168만 6,444명, 그 중 한국인(조선적 포함) 등록자수는 63만 5,269명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 한국인이 가장 많다.

또한 한국인의 영주권자(조선적 포함)는 53만 9,384명으로 일본의 외국인 전체의 영주권자 65만 7,605명의 82%를 점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 중, 한국에서 출생하여 일본에 이주한 이른바 재일 한국인 1세는 전체의 5% 정도로, 재일 한국인의 95%(외교통상부, 2001b: 201)가 일본에서 출생, 일본의 학교에서 일본의 교육을 이수하고, 일본에서 생활하는 정주인들이다. 이와 같이,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사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동시에 일본에 영주하는 정주 외국인이다. 더욱이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 거주하게 된 그 배경에 역사적 특수성 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타외국인들과는 달리 그들이 지니고 있는 다수성, 정주성, 역사적인 특수성 등으로 다른 재일 외국인에 비해 일본 내에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외국인 행정은 곧 재일 한국인에 대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현행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에 관해 재일한국인의 의식과 일본인의 의식을 연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여러가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들의 「재일한국인 관」을 곁들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에 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의견과 요망사항 등을 고찰, 이것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함에 있다.

II. 연구문제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재일 한국인의 의식과 일본인의 의식 그리고 일본인들의 「재일한국인 관」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로서,

1. 일본의 각종 외국인 행정 중 일본의 출입국 관리제도, 일본의 외국인 등록제도, 일본의 외국인 사회보장제도,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문제, 외국인 취직문제, 일본에 귀화하는 문제 등에 관해 재일 한국인 및 일본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2.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은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어떠한 요망 또는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3. 일본인은 평소 어떠한 「재일 한국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것은 사실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설계하는 하나의 탐색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의 설정없이 직접문제의 해답을 구해 보고자 한다.

III. 선행연구의 동향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는 지금까지 아래와 같이 실시되어 왔다.

1. 1974년의 홍승직, 한배호 교수 등이 오사카 거주 재일한국인을 대상(225가구)으로 한 재일한국인의 자아의식연구(이광규, 1983: 298-299)를 시작으로 1984년의 가나가와현에서 실시한 현대거주의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가나가와현 외국인 실태조사위원회편, 1985), 1989년에 오사카, 토요나카, 아마가사키, 이단 등 4개지에서 실시한 재일한국, 조선인의 민족교육 의식에 관한 조사(교토대학 교육학부 비교교육학 연구실편, 1990), 1993년의 효고현내에서 실시된 재일한국, 조선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식조사(つじ本他, 1994), 1993년 재일한국청년회 주관으로 실시한 재일한국인 청년(800명)의 의식조사(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1994), 2000년 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가 실시한 재일한국인(2,924명)의 의식조사(재일본 대한민국민단, 재일한국인 의식조사위원회, 2001) 등이 있었다.

2. 또한 민관식(1994: 145)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9회에 걸쳐 재일한국인(2,147명, 귀화자 105명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가 있었다. 그중 본 연구와 일부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1988년에 실시한 8회째 조사로서, 이 조사에서는 일본의 강제 퇴거제도, 재입국허가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지방자치참가, 사회보장, 복지의 동등적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동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회답자 136명중 32.4%(44명)가 일본의 강제퇴거제도에 대해, 재입국허가제도는 43.3%(59명),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는 50%(68명)가 이들제도를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에의 참가는 30.9%(42명), 사회보장, 복지의 동등적용은 52.9%(72명), 공무원 채용은 49.3%(67명), 취업기회보장은 50.7%(69명)가 이를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리고 김응렬 교수가 본인의 박사논문 작성(1983년, 동경대학)을 위해, 재일한국인의 2, 3세의 개인의 적응 양식과 노인세대의 불안문제를 연구하고자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겪고 있는 생활상황을 분석하였는바, 이 연구는 첫 번째로, 재일한국인 2, 3세의 행동과 의식을 실증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것으로

재일한국인 2, 3세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는 1978년 동경, 오사카 소재, 한국학교(각각 1개교)에 재학중인 고교생 184명(한국학생 40명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2차는 1980~1981년 동경(1개교)과 오사카(2개교)의 한국학교 고교생 전원 및 대학생(일본의 대학생과 단기대 재학생)과 사회인 등 총 568명(한국학생 71명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재일한국인 2, 3세의 개인의 적응양식을 규정하는 3개의 변수 즉 Aspiration 격차와 기회 및 자기능력의 제약인지에 따른 개인의 적응양식을 분석하였다. 동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사회에서 취직기회를 포함한 생활기회를 평등하게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서 재일한국인 2, 3세의 5~6할이 기회에 대한 제약을 지각하고 있으며, 기회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할 미만으로, 회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회제약의 인지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2차례의 조사결과, 재일한국인 2, 3세들은 자신의 능력제약보다 기회의 제약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 재일한국인에 대해 사회적 기회의 개방이 필요시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응렬, 1983: 27-28, 327, 450, 550, 553, 564, 746). 두 번째로 노인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노후생활의 불안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재일한국인 65세이상 1세노인 106명(동경, 가와사키, 오사카 거주자)을 대상으로 1979.7(주로 예비조사) 및 1980.6~1981.2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세대의 생활불안 요인을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사회적 기회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특히 사회적 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재일한국인 1세 노인들이 장기간 산업노동자로서 일본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납세 등의 의무를 다하여 왔음에도 이들이 고령의 이유로 국민연금 수혜자에서 배제되고, 또한 외국국적을 이유로 생활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도 이들의 노후문제를 심각케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요망하고 있다.(김응렬, 1983: 577-580, 591, 609, 673-674).

4. 이상으로 재일한국인의 의식조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기존의 연구와 다른점은 선행연구가 조사대상자를 재일한국인에 국한된 연구였으나 일본인의 의식을 동시에 병행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된 그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IV. 연구방법

위에서 말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를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1) 먼저 재일 한국인의 경우, 표본의 수는 500명 정도로 계획하여, 미회수분, 미완성 조사표를 감안, 재일 한국인 1,0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민단계 조직구성원과 비조직원인 재일한국인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재일 한국인 중 민단계 조직 간부와 일반 민간 신분인 재일 한국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민단계 조직간부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 연령층이 높은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 간부와 산하 단체장,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 간부(18세~30세), 재일본 한국인 청년 상공회 전국 간부(25세~45세) 등 3개 그룹으로 선별하였다. 설문지는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 간부 및 산하 단체장 260명,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 간부 140명, 재일본 한국인 청년 상공회 전국 간부 100명 등 민단계 조직간부 500명과 나고야 거주 재일한국인 500명 등 재일 한국인 1,000명에게 우송하였다. 설문지는 민단간부 및 산하 단체장에게는 2001년 3월14일에 청년회간부는 2001년 3월 17일, 청년 상공회 간부는 2001년 3월 16일, 나고야 거주 재일 한국인은 2001년 3월 7일에 각각 우송하였다. 회수일은 각각 2001년 4월 5일, 4월13일, 3월 30일, 3월 20일이었다. 회수결과는 민단 간부 및 산하 단체장 204명, 청년회 간부 70명, 청년 상공회 간부 56명, 나고야 거주 재일 한국인 119명 등 전체 449명으로부터 회답이 있었다. 조사표 회수율은 민단간부와 산하단체장은 78.5%, 청년회간부는 50%, 한국인 청년상공회 간부는 56%로 이들 3개 민단계 조직간부의 전체회수율은 66%였으며,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은 23.8%로 가장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따라서 재일한국인 전체 회수율은 44.9%였다.

(2) 일본인의 경우는 표본의 수를 300명 정도로 계획하여, 미 회수분, 미완성 조사표 등을 감안, 일본인 6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은 직업을 갖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사회인과 이와는 달리 학생신분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 이들의 반응을 보고져 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나고야 거주 일본 사회인 400명,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생 50명, 나고야 숙덕대학교 대학생 150명 등 전체 6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별하였다. 나고야 거주 일본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나고야 상공회의소의 협조를 그리고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생과 나고야 숙덕대학교 대학생의 경우는 각각 해당 대학원과 대학의 협조를 통해서 배포 및 회수를 하였다. 설문지는 나고야 상공회의소는 2001년 4월 26일에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은 2001년 5월 16일, 숙덕대학교는 2001년 5월 11일에 배포를 의뢰하였다. 회수일은 각각 2001년 5월 30일, 6월 20일, 6월 9일이었다. 회수결과는 나고야 거주 일본 사회인의 경우 9개 회사(東海銀行, 名古屋鐵道, 名古屋商工會議所, 名港海運, 近喜商社, 飼料雜穀, 信龍保育園, 御賣商, 東邦GAS)의 일본인 256명,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생 24명, 숙덕대학교 대학생 109명 등 전체 389명으

로부터 회답이 있었다. 조사표 회수율은 나고야 거주 일본사회인은 64%, 나고야 대학원생은 48%, 숙덕대학생은 72.7%로 가장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따라서 일본인 전체 회수율은 64.8%였다.

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일 한국인의 경우는 먼저 조사 대상자 4개 그룹별(민단간부 및 산하 단체장, 청년회간부, 청년 상공회 간부, 나고야 거주 재일 한국인)로 분류한 다음, 각 그룹별로 각 문항별 회답 번호를 성별, 세대별, 연령대별, 출생 국별, 직업별 등 속성별로 구분, 컴퓨터에 입력, 전산 처리한 후 문항별로 빈도수 및 백분율을 계산, 이를 집계한 후, 최종적으로 재일 한국인 전체 수치를 작성하였다.

(2) 일본인의 경우도 회수된 설문지를 조사 대상자 3개 그룹별(나고야 거주 일본 사회인,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생, 숙덕대학교 대학생)으로 분류한 다음, 각 그룹별로 각 문항별 회답 번호를 성별, 연령대별, 학력별, 직업별, 연간수입별, 결혼 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속성별로 구분, 컴퓨터에 입력, 전산 처리한 후 문항별로 빈도수 및 백분율을 계산, 이를 집계한 후, 최종적으로 일본인 전체 수치를 작성하였다.

(3) 조사 대상자의 기본속성

이번 설문에 회답한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의 기본 속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일 한국인의 경우, ① 남성 327명(72.8%), 여성 122명(27.2%), 세대별은 재일 한국인 1세 14%, 2세 58.4%, 3세 27.4%, 4세 0.2%로 2세 및 3세가 전체의 85.8%를 점하고 있다. ② 조사 대상자의 출생국은 일본이 81%, 한국이 19%이다. ③ 도일시기는 해방(1945.8.15)후가 400명(89%), 해방전이 49명(11%)였으며, 해방전은 민간간부 19명,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 30명이었다. ④ 연령은 19세 이하가 0.7%, 20대(20~29세) 16.5%, 30대(30~39세) 17.6%, 40대(40~49세) 16%, 50대(50~59세) 18%, 60대(60~69세) 23%, 70세 이상 8.2%이다. ⑤ 학력은 초등학교졸 20명(4.5%), 중졸 61명(13.6%), 고졸 150명(33.4%), 단기대졸 53명(11.8%), 대졸 144명(32.1%), 대학원졸 11명(2.4%), 기타 10명(2.2%)였다. ⑥ 직업은 자영업 39%, 회사원 26%, 단체직 종사자 13%로 자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⑦ 연간 수입면에서는 본인의 수입을 밝히지 않은 무회답자가 59%였고, 회답자 183명 중 연간 수입이 300만~500만엔이 84명, 600만~1,000

만엔 42명, 1,000만엔 이상 53명, 수입이 없는 사람이 4명이었다. ⑧ 결혼관계에서는 기혼자가 78%, 미혼자 22%였으며, 기혼자 350명 중 동족간 결혼이 82%, 일본인과의 결혼 17%, 기타 1%순으로 동족간 결혼이 가장 많았다. ⑨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92%, 이들 중 60%가 친척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⑩ 한국어 회화 능력은 간단한 회화 가능자가 33%, 능통한 자 21%, 대체로 가능한 자가 15%였다. ⑪ 한국어 수학 정도는 전연 수학하지 않은 사람이 63%, 수학 경험이 있는 자가 37%였으며, 수학기간 12년 이상이 24%, 1년 미만 22%, 3년 미만 19%, 6년 이상 12년 미만 18%, 3년 이상 6년 미만이 17%였다. ⑫ 한국 방문 유 경험자가 93%였으며, 15회 이상 방문자가 47%인 196명으로 가장 많았다.

2) 일본인의 경우, ① 본 설문 조사의 회답자의 구성은 남성 209명(53.7%), 여성 180명(46.3%)이다. ② 연령은 19세 이하 28.3%, 20대 23.1%, 30대 19.8%, 40대 12.3%, 50대 11.1%, 60대 4.6%, 70세 이상 0.8%로서 30대 이하가 71.2%로 젊은 층이 많았다. ③ 학력은 초등학교졸 1명(0.3%), 중졸 6명(1.5%), 고졸 139명(35.7%), 단기대졸 67명 (17.2%), 대졸 156명(40.1%), 대학원졸 19명(4.9%), 기타 1명(0.3%)였다. ④ 직업별로는 회사원(50.9%)과 학생(34.2%)이 많았다. ⑤ 연간 수입면에서는 본인의 수입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무회답자가 82.5%나 되었으며, 회답자 68명 가운데는 300만~500만엔이 42명, 600만~1,000만엔이 22명, 2,000만엔 이상이 1명, 수입이 전연 없는 사람이 3명이었다. ⑥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기혼자가 41.6%, 미혼자 58.4%였으며 기혼자 중에는 일본인간 결혼이 98.8%였다. ⑦ 한국 방문여부에서는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74%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101명으로서, 1회 방문이 67명(66.3%), 5회 미만이 30명(29.7%), 5회 이상이 3명(3%), 15회 이상이 1명(1%)이었다.

3. 자료의 신뢰도

금번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재일한국인의 경우, 전체 모집단의 확보가 어려워 재일한국인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에 애로가 있었으며, 일본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전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아닌 나고야지역 인사에 한정하였기, 여기서는 신뢰도 측정문제는 생략하고자 한다.

V. 설문내용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에 대한 설문내용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에 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일한국인에 대한 질문내용

1) 일본의 외국인 강제퇴거제도 2) 영주외국인의 일본 재입국허가제도 3) 영주외국인의 정기적인 외국인등록제도 4) 외국인등록증의 상시휴대제도 5) 영주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관계 6) 영주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적용관계 7) 향후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될 시 일본에 귀화자수의 전망 8) 일본에 귀화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시각 9)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한 의견 10) 국적문제로 마음을 상한 경험유무 11) 일본에 대한 친밀감 유무

(2) 일본인에 대한 질문내용

일본인에 대한 질문도 1)항부터 9)항까지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질문내용과 동일함. 10) 최근 재일한국인 중 귀화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 11) 일본의 한·일과거사 기록문제에 관한 견해

2. 연구문제 (2)에 관한 설문

현행의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에 대한 요망 또는 개선사항, 기타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재일한국인에게는 (1) 재일한국인에 대한 처우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과 (2)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의견 또는 요망사항을 문의하였으며 일본인에게도 (1)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하여, 만약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중요도 순으로 기재할 것을 줄 것과 (2) 재일한국인 및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한 의견을 문의하였다.

3. 연구문제 (3)에 관한 설문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평소 「재일 한국인 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일한국인에 대한 호감 유무 (2) 재일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 (3) 재일한국인을 대하는 자세 (4) 재일한국인의 일본사회를 위한 공헌 여부 (5)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재일한국인이 취직을 원하였을 경우 채용의사 여부 (6) 재일한국인과 재일 타외국인과의 처우문제 (7) 재일한국인이 현재 일본에서 받고 있는 처우에 대한 견해

VI.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앞 부분에서는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관해 재일 한국인 및 일본인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어떠한 요망 또는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일본인이 평소 어떠한 「재일 한국인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재일 한국인의 처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연구문제 (1)의 경우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에 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일본의 외국인 등록제도, 일본의 생활보호법과 국민연금법,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 귀화 관련 사항과 기타 몇 가지 아래 사항에 대한 재일 한국인 및 일본인의 반응 및 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로 삼았다.

(1) 동일한 질문 내용에 대한 회답결과

먼저 재일 한국인 및 일본인 양측 모두에게 물은 동일한 질문 내용에 대한 각각의 회답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외국인 강제퇴거제도에 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은 전체 회답자 428명 중 70.8%에 해당하는 303명이 가족과 가정이 일본에 있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행대로가 좋다가 66명(15.4%)이었다.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은 민단간부 76.9%, 청년회 간부 72.1%, 한국인 청년상공회 간부 65.4%,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 62.4%였다.

② 일본인은 전체 회답자 385명 중 59%에 해당하는 227명은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회답결과는 일본인들이 영주 외국인들의 현재의 생활상태에 대해 인식이 깊지 않은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제도를 알고 있는 회답자 158명 중 98명 (62%)은 영주권자에 한해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며, 60명(38%)은 현행대로가 좋다고 하였다. 영주권자에 한해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사람을 조사대상자별로 보면 일본사회인 28.9%, 나고야 대학원생 43.4%, 숙덕대학생 13.7%였다. 그리고 현행대로가 좋다고 회답한 사람은 일본사회인 17%, 나고야 대학원생 4.4%, 숙덕대학생이 14.7%였다.

③ 특별영주권자라도 내란죄, 외환죄(外患罪),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처분을 받은 경우, 일본에서의 강제퇴거제도의 대상이 된다.

2) 재일 외국인의 영주권자(특별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에 최대한 5년간 체류 후, 일본에 재입국 할 경우, 재입국 허가가필요한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은 전체 회답자 432명중 81.9%에 해당하는 354명이 재입국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현행대로가 좋다는 사람은 34명에 7.9%로 8할 이상의 회답자가 현행의 재입국허가제도를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일본인은 전체 회답자 386명중 영주 외국인에 한해 재입국 허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33.1%인 128명, 지금대로가 좋다가 26.2%, 101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40.7%인 157명이었는 바, 이런 회답은 일본인들이 자국내 영주외국인의 생활상태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재입국허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본사회인 32.8%, 나고야 대학원생 50%, 숙덕대학생 30.3%였다.

3) 영주 외국인 (특별 영주권자)의 경우, 7년마다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재일 한국인 전체 회답자 434명중 77.2% 인 335명이 신고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신고 또는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등록갱신을 해야 하는 현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이 제도가 외국인의 관리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그리고 일본

인의 경우처럼, 주민대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회답한 사람도 230명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단간부가 64.1%, 청년회간부 42.2%, 청년상공회 간부 35.8%,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이 54%였다. 또한 재일외국인은 본인의 거주지 등 종전사항과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② 일본인은 전체 회답자 388명의 46.7%인 181명이 신고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등록갱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던 바, 이와같이 회답한 사람은 일본사회인 45.9%, 나고야대학 대학원생 58.3%, 숙덕대학생 45.9%였으며 그리고 현행대로가 좋다는 26.5%인 103명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6.8%인 104명이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가 현행대로 보다 20% 정도 많았다. 일본인의 경우는 주민기록대장법에 의거(1967년 제정), 주민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의 거주지 변경 등 신고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일외국인은 20만엔의 벌금이, 일본인에게는 5,000엔이하의 과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내·외국인간 그 차이가 크다(田中宏, 1995: 30).

4) 외국인 등록증의 상시 휴대 제도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 전체 회답자 424명중 86.8%인 368명이 비영주권자에 한해 적용하고 영주권자 에게는 휴대의무를 제외 내지 제도자체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행정증명으로 대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② 일본인은 전체 회답자 370명중 62.7%에 해당하는232명이 영주권자에게는 예외로 하고 비영주권자 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던 바 이와같이 회답한 사람은 일본사회인 63.9%, 숙덕대학생 61.5%, 나고야대학 대학원생 55%였으며, 그리고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사람은 37.3%인 138명이었다. 그리고 일부 회답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회사 사원증이나여권 등 다른 증명을 제안하였다.

③ 일본의 외국인 등록법에 의하면 일본에 1년 이상 거주 하고있는 16세 이상의 사람은 외국인 등록증을 상시 휴대토록 되어있다.

5) 일본의 생활보호법상, 영주외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보장을 받고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재일한국인 전체회답자 436명중 동등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143명(32.8%), 동등하다가 131명(30%), 잘 모르겠다가 162명(37.2%)이었다. 동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고령자와 장애자의 경우, 일본인에 비해 수당지급에 있어 금액상의 차이가 있으며,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점 등을 들었다.

② 일본인 전체회답자 388명중 78.9%인 306명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1.1%인 43명은 동등하다고, 10%인 39명은 동등하지 않다고 보고있다. 동등하지 않은 이유로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15명), 어쩐지 심리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3명),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있다고는 말 할 수 없다(2명) 등이었다.

③ 일본의 원호법을 보면 전제회생자 원호의 법률 15가지중 내국인과 동등한 것은 원자폭탄 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과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2가지뿐이며, 전치재해 보호법, 은근법, 전상병자 특별 원호법 등 13가지 법률은 외국적자는 제외되고 있다. 즉, 일본의 원호법은 군인군속 및 준군속의 공무상 전상 및 사망 등에 관해서 국가보상이 주어지고, 장애자 본인에게는 장애자 연금을, 사망자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유족급여금 및 조위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 군속이었던 한국인에게는 지금까지 은금을 비롯해 전해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평화조약 국적이탈자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2001년 4월 1일부터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자중 1937년 7월 7일 이후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1941년 12월 8일 이후 사망한 자의 유족과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중증장애 상태에 있었던 유족에게는 조위금으로서 260만엔, 중증전쟁부상, 질병자에게는 부상위문금으로서 400만엔의 일시금을 지불하는데 불과하였다.

6) 귀하는 국민 연금법상, 영주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 전체 회답자 427명중 31.6%에 해당하는 135명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동등하다고 한 사람은 118명(27.6%), 잘 모르겠다가 40.8%인 174명이었다. 그리고 동등하지 않다고 한 이유로, 영주 외국인의 경우는 일본인과는 달리 법 개정시 경과조치를 부여하지 않아, 국민연금법상 적용이 제외되어 연금수급 불가능자(무 연금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일본인 전체 회답자 387명중 11.6%인 45명이 영주외국인도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9.8%인 38명은 동등하지 않다고, 잘 모르겠다가 78.6%인 304명이었다. 또한 동등하지 않다고 회답한 이유로는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8명), 연금금액상 일본인과 차이가 있다(2명), 어떤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2명), 법 개정시 적용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기 때문(1명) 등이었다.

③ 일본의 국민 연금법은 법 제정 당시 외국인을 제외하였으나, 1982년 법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에게도 적용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노령연금의 경우 60세까지 25년이상 연금을 불입하여야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바 1982년 1월 1일 기준 35세 이상인 외국인에게는 가입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장애자 연금도 82년 당시 20세가 초과된 외국인에게는 수급자격이 제외되었다. 이것은 노령연금과 장애자연금의 수혜자격 적용에서 일본국적을 가진 노령자와 장애자에게 주어진 가입기간의 단축, 보험료 면제기간의 특례 등의 구체 조치가 영주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향후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부여, 지방 공무원, 학교교사, 교수 등 각 분야에 걸쳐 문호가 지금보다 확대, 개방될 경우, 외국인의 일본 귀화자수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 전체 회답자 430명중 35.6%인 153명이 지금보다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과 같을 것이다가 30.5%, 지금보다 감소 할 것이다가 20.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측이 많았다.

② 일본인도 전체 회답자 385명중 57.1%인 220명이 귀화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12%인 46명은 지금과 동일하게, 9.6%인 37명은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8) 이미 일본에 귀화한 재일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은 전체 회답자 428명의 23.6%인 101명이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14.7% 63명이었다. 그리고 어느 쪽도 아닌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61.7%인 264명이었다. 따라서 이미 일본에 귀화한 동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귀화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단간부가 16.9%, 청년회간부 14%, 청년 상공회간부 26.4%,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이 39.1%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7.1%, 여성이 6.5%였으며, 세대별로는 1세가 2.1%, 2세가 18.2%, 3세 3.3%였으며 4세는 중립적인 응답을 보였다. 또한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졸이 1.6%, 중졸이 5.8%, 고졸 6.8%, 단기대졸 2.3%, 대졸 6.3% 등이었다. 한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민단간부가 17.8%, 청년회 간부 15.7%, 청년상공회 간부

3.8%,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 13.9%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2.1%, 여성이 2.6%, 세대별로는 1세가 3%, 2세 7.5%, 3세 4.2%,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졸이 0.2%, 중졸 1.6%, 고졸 5.4%, 단기대졸 1.6%, 대졸 4.7%, 대학원졸 0.7%였다. 또한 이를 결혼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간 결혼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20.5%, 부정적으로가 16.3%, 배우자가 일본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41.4%, 부정적이 3.4%였다. 최근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산하 재일동포 21세기 위원회가 민단 단원으로 지금까지는 단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해온 한국인의 후손으로써 일본에 귀화한 자에게도 앞으로 민단 단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귀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예라 하겠다.

② 일본인은 전체 회답자 376명중 54.5%인 205명이 일본에 귀화한 재일 한국인에 대해 같은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45.5%인 171명은 법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역시 한국인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일본인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본사회인 56.1%, 나고야 대학원생 90.9%, 숙덕대학생 43.5%였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속성별로 보면 남성이 63.2%, 여성이 36.8%였으며, 연령상으로는 65~69세가 60%로,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이 78.9%로,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8.3%, 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66.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역시 한국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일본사회인 43.9%, 나고야 대학원생 9.1%, 숙덕대학생 56.5%였다.

③ 외국인의 일본국적 취득(귀화)자는 1952년부터 1999년까지 31만 7.615명으로 그 중 한국인(조선족 포함)은 23만 3.920명으로 전체의 73.7%를 점하고 있다(李節子, 2001: 16).

9)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재일 한국인은 전체 회답자 427명중 56.9%에 해당하는 243명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선거권을 먼저 부여한 후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가 19%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가 75.9%, 선거권만 부여되어야 한다가 12.6%로, 따라서 최소한 선거권이라도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8명, 88.5%에나 달하고 있어 재일한국인들이 지방 참정권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일본인 전체 회답자 386명 중 44.3%인 171명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먼저 선거권을 부여한 다음 피선거권 부여가

15.8%인 61명으로 회답자의 60.1%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와 같이 회답한 사람을 속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9.7%, 여성이 60.5%, 연령상으로는 50~54세가 76.5%로,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이 68.4%,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63.6%, 한국방문 5회 이상 10회 미만 유경험자가 82.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선거권만 부여가 11.6%였는 바 결과적으로 71.7%가 최소한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한 반면 선거권의 부여도 필요 없다는 의견은 6.5%인 25명에 지나지 않았다.

③ 이 문제와 관련, 일본의 헌법학자 長尾一紘교수(2000: 203)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둘러싼 논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약 10년 간 계속되었다. 이것을 제1라운드라고 하면 수년의 소강상태를 거친 지금, 제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제1라운드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가능여부의 논의였지만 제2라운드에서는 어느 선거까지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또한 재일한국인 徐龍達교수(2000: 21)는 정주외국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획득운동의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그 첫째는 정주외국인의 인권옹호, 차별철폐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진정한 국제화 즉,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에로의 실현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며, 선거권만 부여하고 있는 나라는 포르투갈, 헝가리, 베네수엘라, 칠레 등이다.(中日新聞, 2000년 2월 16일자)

(2) 별개의 질문에 대한 회답결과

1)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질문

① 귀하는 지금까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적문제로 고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회답자 434명 중 60.1%인 261명이 있다고 하였으며, 없다고 173명(39.9%)였다. 있다고 한 사람을 보면 민단간부가 59.5%, 청년회간부 47.1%, 청년상공회 간부 74.1%, 나고야 거주 재일한국인 62.4%였다. 이를 속성별로 회답결과를 보면, 남성이 60.3%, 여성이 59.8%, 연령상으로는 40~44세가 79.5%로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 72.7%, 직업별로는 연금생활자 71.4%, 연간 수입면에서는 1,500만엔이상이 100%로 가장 많았다.

② 귀하는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회답자 443명중 40%에 해당하는 177명이 매우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 사람도 175명(39.5%)에 달하여 일본에 대하여 친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352명으로 79.5%나 되었다. 매우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민단간부 34.8%, 청년회 간부 57.9%, 청년상공회 간부 69.1%, 나고야 거주 재일한국인 24.6%였다.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민단간부 44.3%, 청년회간부 36.2%, 청년상공회간부 27.3%, 나고야거주 재일한국인 39%였다. 또한 매우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2.5%, 여성이 31.1%, 연령별로는 1세가 11.1%, 2세 39.3%, 3세 54.5%, 4세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졸이 30%, 중졸 31.1%, 고졸 38%, 단대졸 10.6%, 대졸 47.9%, 대학원졸 54.5%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한 사람은 남성이 37.6%, 여성 42.6%, 1세가 55.6%, 2세 38.2%, 3세 32.5%, 초등학교졸이 55%, 중졸 13.1%, 고졸 36.7%, 단대졸 43.4%, 대졸 37.5%, 대학원졸 18.2%였다. 그리고 결혼관계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간 결혼자는 매우 친밀감을 갖고 있다가 33.7%,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있다가 43.4%였으며 배우자가 일본인 사람은 매우 친밀감을 갖고 있다가 41.4%,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있다가 36.2%였다. 이는 조선일보사가 2002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인 20세 이상 1,0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일본에 친밀감이 있다고 응답한 35%에 비해,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2배 이상 높은 친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인에 대한 질문

① 재일 한국인 중 일본에 귀화하는 사람이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회답자 374명중 64.7%인 242명이 외국 국적으로서는 사회활동상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에 영주할 것이므로 가 29.7%, 기타가 5.6%였다.

② 귀하는 최근의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한·일의 역사 기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회답자 383명중 70.5%인 270명이 과거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 자녀교육을 위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응답한 사람은 일본 사회인이 67.7%, 나고야 대학원생 71.4%, 숙덕대학생 76.9%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66%, 여성이 73.3%,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75.5%, 20~24세가 51.4%, 25~29세 74.5%, 30~34세 76.1%, 35~39세 74.2%, 40~44세 65%, 45~49세 75%, 5

0~54세 69.2%, 55~59세 41.2%, 60~64세 61.5%, 65~69세 60%, 이와 반면 70세 이상은 축소해도 좋다가 66.7%였다.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학력별로 보면 중졸 16.7%, 고졸 74.1%, 단대졸 53.7%, 대졸 74.4%, 대학원졸 73.7%였다. 반면, 장래를 생각, 과거 일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거나 기록을 축소해도 좋다고 한 사람은 5.8%인 22명에 지나지 않았다.

2. 연구문제 (2)의 경우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과 관련, 재일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개선을 바라는 것과 이에 관한 요망 사항, 기타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 삼았다.

(1) 재일 한국인의 경우

1) 개선을 요하는 사항

먼저 조사 대상자들이 제안한 개선 사항을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기술하면,

① 특별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 후생, 복지면 등 각종 분야에 걸쳐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기를 원한다가 56명(22.2%)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 그 다음으로 지방 참정권 부여 희망 55명(21.8%) ③ 취직 및 승진시 국적에 의한 제한 철폐 35명(13.9%) ④ 일본인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편견 불식 등 인식 개선 31명(12.3%) ⑤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 부여 25명(9.9%) ⑥ 외국인 등록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문제 등 외국인 등록법 개정 및 재입국 허가제도, 강제퇴거제도 등 출입국 관리제도의 개선 요망 21명(8.3%) ⑦ 주택임주, 은행융자, 결혼문제, 골프회원권 구입시 등 사회생활상의 민족차별 개선 13명(5.2%) ⑧ 일본인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필요 7명(2.8%) ⑨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소수 민족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수립 요망 4명(1.6%) ⑩ 일본의 참다운 국제화 추진 기대 4명(1.6%) ⑪ 이중 국적의 인정 1명(0.4%)등 전체 252명이 11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2) 의견 및 요망사항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한 의견 및 요망 사항으로는 74명이 23종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바, 위 1)항과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 많은 의견으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의 외국인 행정도 각 분야에 걸쳐 문호 개방을 할 것과 다문화 공생의 차원에서 외국인을 동반자로 생각하기를 바라며, 재일한국인도 일본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일본 국민 계도

요망, 일본의 역사 교육 충실, 외국인에 대한 인권 존중 등이었다.

(2) 일본인의 경우

1) 개선을 바라는 사항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일본인들이 개선을 바라는 사항으로 67명이 1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는바, 그중 다수를 차지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주 외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에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각 15명) ② 공무원, 교사 채용 등 취직 기회 확대, 연금, 건강보험, 전후보상 문제해결 등 사회보장 제도 확충(각 8명) ③ 일본학교 교육개선(7명) ④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2명) ⑤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의 완화(2명) ⑥ 자치단체에 외국인 상담창구의 설치(2명) 등이었다.

2) 의견 및 요망사항

의견 및 요망 사항으로 일본인 31명이 21가지를 제시하였는바, 상기 1)항과 내용이 동일한 것은 생략하고, 그 중 다수 의견으로,

① 소수 민족의 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 공생, 공존의 인식 필요 ② 납세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일본 국민과 같은 정도의 권리 보장 ③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자 적극 수용 ④ 출생과 성장이 일본인 사람은 일본인과 같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우가 바람직함 등이었다.

3. 연구문제 (3)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연구결과는 일본인들은 평소 어떠한 「재일 한국인 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인들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호감 유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재일한국인을 대하는 자세, 재일 한국인과 재일타 외국인과의 처우 문제 등에 관한 일본인들의 반응 및 의견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 삼았다.

(1) 귀하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회답자 386명중 2.6%인 10명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1.2%인 82명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약 24% 92명이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속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51.7%, 여성이 21.7%, 연령상으로는 65~69세가 40%로, 학력상으로는 대학원졸이 31.6%, 직업상으로는 회사원이 24.5%, 연간 수입면에서는 800만엔이 100%, 한국방문 회수면으로는 5회 이상 방문자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와 반면, 매우 싫다가 0.3%인 1명, 싫다가 1.3%인 5명으로 1.6%가 싫다는 반응을 보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측이 22%정도 많았다. 그리고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이 288명(74.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와 같이 대답한 이유로 재일한국인 중에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88명), 재일 한국인이라고 특별히 의식한 일이 없기 때문(25명), 재일 한국인을 일률적이 아닌 개개인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5명)등 이었다.

(2) 귀하는 재일 한국인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설문에 응답한 일본인들이 재일 한국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히 의식한 적이 없다(64명) ② 거의 일본인과 평등하게 생각한다(29명) ③ 근면, 성실, 정직하며 꾸밈이 없고 겸손하다(24명) ④ 차별을 하는 일본인 있어 미안한 생각이 든다(21명) ⑤ 결속력, 단결력이 강하다(14명) ⑥ 민족의 긍지를 소중히 여긴다(7명) ⑦ 반일 의식을 가지고 있다(7명) ⑧ 일본인에 대해 경쟁 의식을 갖고 있다(6명) ⑨ 일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외국인이다(6명) ⑩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6명) 등이었다.

(3) 귀하는 평소 재일 한국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전체 회답자 385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의식한 적이 없으므로 65.4%인 252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일본인과 같은 수준으로가 25.5%인 98명 그리고 재일 외국인으로서가 9.1%인 35명이었다. 일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별로는 남성이 70명, 여성 28명, 연령별로는 30대 22명, 20대와 40대가 각각 20명, 50대가 15명, 19세 이하가 14명, 60대가 6명, 70대가 1명이었다. 그리고 학력별로는 대졸 49명, 고졸 24명, 단기대졸 16명, 대학원졸 6명, 초등학교 및 중졸이 각각 1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59명, 학생 23명, 자영업 4명, 무직 1명이었다.

(4) 귀하는 재일 한국인이 일본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본인 전체 회답자 311명의 15.9%인 61명이 공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바, 이를 속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22.1%, 여성이 8.4%, 연령상으로는 6

0~64세가 30.8%로,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이 27.8% 직업별로는 연금생활자가 33.9% 한국방문 5회이상~10회미만 유경험자가 28.6%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공헌하지 않는다가 2.9%인 11명으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응답자의 수가 13% 많았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이 81.2%였다. 공헌하고 있다고 회답한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사례로 세금납부처럼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공헌하고 있다(10명), 일본에서 사업을 잘 경영한다(9명), 일본의 GDP를 높이고 있다(9명),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7명), 유기업, 음식점 경영, 학계, 문화계, 예능계 등에서 공헌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내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으로 IT계의 孫正義, 도예계의 沈壽官(14대), 대학교수로 徐龍達 등 9명, 의사로 孫瑤權 등 3명,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설턴트로 金敬得 등 5명, 작가로 金達壽 등 9명, 예술, 예능계 인사로 崔洋一 영화감독 등 9명, 스포츠계의 高成厦 축구감독 등 2명, 바둑계의 趙治勳 등 7명 등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河炳旭, 2001: 52, 91, 120-126).

2) 동일한 질문을 재일 한국인에게 한 결과, 전체 회답자 431명의 86.6%인 373명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고 하였다.

(5) 만약 귀하가 경영하는 회사에 재일 한국인이 취직을 원하였을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 회답자 371명중 97%인 360명이 능력이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불과 3%만이 채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채용하겠다는 이유로서는 업무에 있어서는 능력주의와 실적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국적은 관계가 없다고 한 사람이 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인간으로 평등하기 때문인가 10명,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되면 채용한다가 7명이었다. 결과적으로 회답자의 거의 전부가 자기회사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귀하는 일본에 영주하는 재일 한국인의 일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 각종 행정면에 있어 재일의 타 외국인과의 비교,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본인 전체 회답자 380명 중 85.8%인 326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타 외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해도 좋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회답한 사람을 속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5.3%, 여성이 86.4%, 연령상으로는 19세미만이 89%와 20세~24세가 88.2% 학력상으로는 중졸이 100%, 직업상으로는 연금생활

자가 100%로 가장 많았다.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가 14.2%인 54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사회인 12.7%, 나고야 대학원생 45%, 숙덕대학생 12%였다. 또한 이를 속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14.7%, 여성이 13.6%, 연령상으로는 70세 이상이 33.3%, 학력상으로는 소학교졸이 100%, 직업별로는 학생 17.2%, 5회이상~10회미만 한국방문 유경험자가 27.5%로 가장 많았다.

2) 이와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재일 한국인은 전체 응답자 423명의 65.2%인 276명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귀하는 재일 한국인이 일본의 행정제도 또는 일반 사회면에 있어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본인 전체 응답자 387명 중 47.8%에 해당하는 185명이 재일 한국인이 지금까지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일본사회인 46.1%, 나고야 대학원생 62.5%, 숙덕대학생 48.6%였다. 그리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가 33명에 8.5%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169명에 43.7%였다. 그들이 제시한 불평등한 사례로 공무원, 기업체 등의 취직시의 불평등(21명), 선거권이 없기 때문(9명), 학교 수학시(8명), 민족적 편견(5명), 결혼상차별, 사회보장 제도면, 주택임차시(각 2명), 은행용자시, 뭔가 불평등한 점이 있는 것 같다(각 1명)등이었다.

2) 위와 동일한 질문에 대해, 재일 한국인은 일본 사회의 그들에 대한 대우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5.5%(236명)였는 바, 이렇게 응답한 사람을 보면 민단간부가 62.5%, 청년회간부 64.6%, 청년상공회간부 44.4%, 나고야 거주 재일한국인 43.3%였다. 그리고 충분하다는 14.8%(63명)였다.

3) 재일한국인 처우문제와 관련, 재일한국인 金東勳 교수(민관식, 1994: 124-125)는 다음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재일한국인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 내국민 대우를 인정,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국제수준에 합당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민족성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민족교육의 제도적인 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셋째, 일본국민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권리 및 대우면에서도 일본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한다. 또한 鄭印變 교수(1996: 86)도 재일한국인의 미결문제로서 외국인등록제도의 개선, 취업상의 제한 폐지, 지방선거 참정권의 획득, 민족교육의 실시, 무연금자문제 등을 들었다. 그리고 李光奎 교수(1983: 391-393)도

재일한국인은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연구하며 반성하며 소수민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끔 온 지혜와 노력을 집중하여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제권리와 권익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본도 재일한국인을 정당하게 대우할 것과 이와관련, 한국내에 있는 한국인 그리고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8) 재일 한국인에 대한 기타 의견

1) 재일 한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되므로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도 미국인과 유럽인을 대하는 것처럼 일본 사회 전체가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재일 한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한국인들은 그 지역 일본사회와의 교류 증진이 요망된다.

3) 재일 한국인을 포함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 동일한 위치로 보아야 한다 등이었다.

VI.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의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들의 위 설문응답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의 현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제도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제퇴거제도에 대해서는 70.8%가, 재입국허가는 81.9%, 정기적인 외국인 등록갱신제도는 77.2%,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는 86.8%가 이를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술한 1994년도의 조사결과보다 이들 제도에 대한 폐지를 훨씬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법과 국민연금법상에서도 일본인과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수보다 많은 것에서도 이를 알수 있다. 이와 반면 일본인들의 경우는 자국의 외국인행정에 관한 설문내용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을 미루어 보아 일본인들은 재일외국인 행정에 대해 관심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상 및 국민연금법상 일본인과 영주외국인과의 법적용상의 동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잘모르겠다고 각각 78.9%와 78.6%인 점, 영주외국인 강제퇴거제도에 대해서도 59%가, 재입국허가제도에 대해 40.7%가 잘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일본인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에 대해서는 영주권자

는 예외로 하는 것이 좋겠다가 62.7%, 영주권자의 정기적인 외국인등록제도는 신고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시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가 46.7%의 의견을 보였다.

2. 다음으로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관련, 개선 또는 요망사항으로 재일한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사항으로는 특별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후생, 복지면 등 각종 분야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바라고 있으며, 지방참정권 부여 희망, 취직 및 승진시 국적에 의한 제한 철폐, 일본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편견 불식,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 출입국관리 및 외국인등록제도 개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개방, 동반자적 관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인도 영주외국인의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 지방참정권 부여, 공무원, 교사 채용 등 취직 기회의 확대,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수민족의 문화를 인정하는 다문화 공생·공존의 인식 필요,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자 수용 및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을 들었다.

3.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재일한국인 관」은 설문내용에 따라 시각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국인을 밝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먼저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재일한국인들이 취직을 원하였을 경우, 응답자의 97%가 능력만 있으면 국적에 관계없이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 재일한국인들을 일본인들과 같이 평등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품행을 근면·성실하고 정직하며 꾸밈이 없고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재일한국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점등으로 알 수 있으며, 이와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재일한국인의 일본사회를 위한 공헌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81.2%가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점, 재일한국인이 현재 일본 내에서 받고 있는 처우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7.8%(평등하다는 8.5%)이었으나, 재일의 타외국인과의 대우문제에 있어서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그 배경에 한·일간의 역사적 특수성이 있지만, 타외국인과 동등한 처우라도 좋다는 사람이 85.8%로 나타났는바, 이는 일본의 젊은 세대일수록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재일한국인의 실태를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이번 연구를 함에 있어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표본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추출이 필요시되며, 재일한국인의 경우도 한국적(민단계)외에 조선적(조총련계)도 포함하는 등 보다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겠다.

2. 본 연구결과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관련, 제도개선 또는 새로운 정책수립이 요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출입국 관련 영주외국인의 강제퇴거제도는 일본에 있는 영주외국인의 가족과 가정 보호 측면에서, 재입국허가제도는 생활의 바탕을 일본에 두고 있는 정주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정기적인 외국인등록갱신제도는 신고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한해서,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문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증명(예, 운전면허증, 사원증, 여권등)으로 대체하는 등 이들 제도의 개선이 요망시 된다. 또한 재일한국인은 전후 반세기이상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활동에 참가하는 등 지역사회발전에 응분의 기여를 함과 동시에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를 일본인과 동등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이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지역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인 지방참정권이 조속히 부여되었으면 한다. 이 문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재일한국인의 75.9%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그리고 최소한 선거권만이라도 부여되기를 88.5%가 바라고 있으며 일본인의 경우도 60.1%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71.7%가 최소한 선거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는 바, 현재 일본국회에 계류중인 동 법안이 하루속히 심의, 성립되기를 바랄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이 일본의 대외국인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 재일한국인들은 직접 당사자 차원에서 그들의 오랜 숙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일본인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국내의 영주외국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인식 하에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시 되며, 그리고 일본정부의 21세기 새로운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외국인에 대한 문호개방을 위해 기존의 제도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정책수립 등이 있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 외교통상부. 2001(a). 『재외동포현황』. 서울: 마스터상사.
 외교통상부. 2001(b). 『일본개황』. 서울: 마스터상사.
 李光奎. 1983. 『在日韓國人』. 서울: 一潮閣.
 鄭印燮. 1997.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徐龍達 外 2人. 2000. 『多文化共生社會への 展望』. 東京: 日本評論社.
 河炳旭. 2001. 『韓國系 日本人』. 東京: 文藝社.
 関實植 著. 金敬得. 金容權 (共譯). 1994. 『在日韓國人の現状と未來』. 東京: 白帝社.
 李節子. 2001. 『在日外國人の人口動態』. 東京: (株)求龍堂 印刷.
 田中宏. 1995. 『在日外國人』. 東京: 岩波書店.

- 長尾一紘. 2000. 『外國人の參政權』. 東京: 世界思想社.
『中日新聞』. 2000年 2月 16日.
- 在日本 大韓民國民團, 在日韓國人 意識調查員會. 2001. 『在日韓國人 意識調查 中間報告書』. 東京: 在日本大韓民國 民團 中央本部.
- 在日本大韓民國 青年會. 1994. 『在日韓國人 意識調查, 中間報告書』. 東京 : 在日本 大韓民國 青年會 中央本部.
- 神奈川縣 内外國人 實態調查委員會編. 1985. 『神奈川縣內 在住 外國人 實態報告書-韓國, 朝鮮人, 中國人について』.
- 京都大學 教育學部 比較教育學 研究室編. 1990. 『在日韓國'朝鮮人の 民族教育意識』. 明石書店.
- つじ本他. 1994. 『在日韓國, 朝鮮人 白書』. 明石書店.
- 金應烈. 1983. 『在日韓國人社會』. 東京大博士論文.

Research on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Japanese People in Understanding of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Focusing on the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Residential Foreigners

Chung Chan-won

Diplomat of Korean Government, ex Nagoya Consul General

This is a study on consciousnes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concerning the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guide for the betterment of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For this study, three topics were chosen as follows :

1. The consciousnes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concerning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Japanese government for the foreigners
2. The demand for betterment from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concerning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3. The common 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shared by the Japanese people

To deduce the results from the topics above, empir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with survey for both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The survey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performed between March 14th 2001~April 13th 2001, which was targeted on executive members of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204 persons), executive members of

Korean Youth Association in Japan (70 persons), executive members of Korean Youth Commerce Community (56 persons), and Korean residents in Nagoya city (119 persons). The survey for the Japanese people was performed between May 16th 2001~June 20th 2001, which was targeted on working members of Nagoya city (256 persons), undergraduate students of Aichi Shukutoku University (109 persons), and graduate students of Nagoya University (24 pers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most of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shared strong dissatisfaction against the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On the other hand, most of the Japanese people responded with Dont Know for each question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showing lack of interest in such matter. The betterment of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was claimed from both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survey,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wed stronger tendency than the Japanese people with 252 persons claiming 11 demands, and 23 suggestions from 74 persons. The survey on the Japanese people resulted with 16 demands claimed by 67 persons, and 21 suggestions from 31 persons.

The survey on 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that was targeted on Japanese people showed contrary results depending on the questions asked.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specific case where betterment or new policy should be made concerning the Japanese administration for the foreigners. This study differs from any other such studies preceded for it has simultaneously studied on both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the Japanese people, for the first time.